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특별법 5월 입법관철 범도민 열기 재결집	1
강원도민일보	02면	"정부협의 위해 다닌 길 지구 한 바퀴" 특별법 통과 자신감	1
강원도민일보	03면	균형발전 '강원 역할론' 부각… 권한이양 요구 결집·확산	2
강원도민일보	03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달라" 규제 완화 한목소리	3
강원도민일보	03면	각계각층 인사 대거 참석 분위기 고조	3
강원도민일보	08면	숨가쁜 국회의 시간 속타는 '강특법' 개정… 내주 분수령	4
강원도민일보	16면	양구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날 점등식	4
江原日報	02면	강원도의회 광역의회 최초 ‘의회 행정실무 매뉴얼’ 발간	5
춘천MBC	온라인	강원도의회, 의회 행정 실무 매뉴얼 첫 발간	6
연합뉴스		강원도의회, 광역의회 최초로 '행정실무 매뉴얼' 발간	7
강원타임즈	온라인	‘제2회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양양군 개최	8
강원도민일보	04면	민주당 도당 "정치는 듣는 힘, 현장 목소리 청취"	9
江原日報	27면	도소방본부 AI 앰뷸런스 시범 적용 선포식	9
강원경제신	온라인	홍천교육지원청, 홍천지역 학교(석화초·홍천중) 이전 추진 ...	10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홍천 너브나래 작가회 창립전	11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김진하(왼쪽) 양양군수·진종호(양양) 도의원	11
江原日報	02면	망상1지구 현지 감사 마무리한 道 '공동주택 끼워넣기' 경...	12
江原日報	27면	“도전역 ‘여성친화도시’ 지정 때까지 협력관계 다져가자”	13
강원도민일보	20면	강릉 노암초교부지 수영장 재탄생 '주민 염원 실현'	14
강원도민일보	13면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적합' 추진 탄력	14
강원도민일보	14면	횡성군 의료취약지 원격 재활치료 본격화	15
강원도민일보	15면	영월군 남부권 중심지 도약 국비확보 총력	15
江原日報	20면	동해시 '염분차발전' 상용화 박차	16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시 역점 추진 정원도시 조성 속도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전·월세 신고 자발적 정착으로	17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지역상품권 제한 국민 납득해야	18
江原日報	25면	[사설] 동해안 산불 국방대응 수준, 문제는 예산 확보	19

강원도민일보

2023년 05월 12일 (금)
종합 01면

'지방시대 힘찬 개막-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인 선언 대회'가 11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주최 측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과 김진태 도지사, 최양희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장과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유상범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도내 시장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이 강원특별법 5월 입법을 촉구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결의를 다지고 있다. 김정호

강원특별법 5월 입법관철 범도민 열기 재결집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인선언대회

자치도 D-30, 성공출범 동력 마련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총력 다짐

자치분권 강원인 선언문 채택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꼭 한 달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5월 입법 관철'을 위한 범도민적 열기가 재결집됐다.

강원도와 강원도민일보, 강원특별자치도범국민추진협의회는 11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지방시대 힘찬 개막-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자치분권·균형발전강원인 선언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강원특별법이 강원도를 위한 법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살리는 법"이라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고, 이달 말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 것을 결의했다. 강특법 전부개정안 입법 첫 관문인 국회 공청회(10일) 직후, 강원인 선언 대회가 열리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다시 마련됐다.

이날 대회엔 주최 측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과 김진태 도지사, 최양희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장을 비롯해 강원도와 도내 여야정치권, 18개 시군, 도의회, 도교육청, 18개 시군의회, 경제계, 주민자치회, 범도민추진협의회 등 각계각층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정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김중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자치분권이 강원도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했고,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꼭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최양희 강원특별자치도범국민추진협의회장은 "5월 입법관철을 위해 300만 강원인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자치분권·균형발전 2023 강원인 선언문'이 채택, 김 지사에게 전달됐다. 선언문은 국회와 대통령실에 전달된다.

박지은·이세훈 ▶관련기사 2·3·8면 영상 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5월 12일 (금)
종합 02면

"정부협의 위해 다닌 길 지구 한 바퀴" 특별법 통과 자신감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인선언대회

입법 최전선 지역인사 9명 발언

"강원, 강원원팀 준말" 단결 강조

법안 일정대로 통과 총력 약속

11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열린 '지방시대 힘찬 개막-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인 선언 대회'에서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영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입법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지역사회 주요 인사들은 특별자치도 출범 한 달 앞, '대동단결'을 재차 약속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강원도민일보·강원특별자치도범국민추진협의회 공동주최·주관으로 11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열린 '지방시대 힘찬 개막-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자치분권·균형발전강원인 선언대회'에서 인사말에 나서 "정부 협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수백번을 다니며 협의했다"며 "거리를 따져보니 지구를 한 바퀴(약 4만6000㎞)를 돌았다"며 특별법 통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해킹문제 질의로, 국회 행정안전위 민주당 소위원장이 (특별자치도) 공청회를 열지 못하겠다고 했다. 당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양보했다"며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유 위원장은 "법사위 통과 그 순간을, 환호성이 울리는 순간으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강원도의 '강원'은 강원 원팀이라는 말이 있다. '대동단결'은 대관령과 동해의 단결이다"며 "평화와 환경, 삶터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를 언급했다.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국민의힘이 역할을 크게 하셨다고 하는데, 공청회 다음에 해도 되는 선관위 관련 질의를 왜 지금 하느냐"고 비판하면서 "향후 심의는 일정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청회를 했으니, 시간이 잘 맞으면 22일 법안소위-25일 행안위-29일 법사위를 하고, 30일 본회의가 진행되면 통과 과정이 되겠다. 그 일정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민의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닌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도민들의 권리가 뻗어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특별자치도가 깡통으로 출발하느냐, 축제의 분위기에서 출발하느냐를 가르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특별자치도"를 강조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강원도민들이 똘똘 뭉쳐 더 특별한 강원도, 더 질 높은 강원도민의 삶,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강원교육을 만들자"고 했다.

최양희(한림대 총장)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장은 "특별자치도 통과를 가장 기다리는 분들은 강원도민, 출향도민 300만명"이라며 "큰 힘으로 승화시켜 강원도 번영을 가져올 분들"이라고 '300만 도민'의 기대를 전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은 "'우리 강원도에 자유를 달라. 아니면 족쇄를 달라', 이같은 구호로 함께 하자. 대한민국 자치분권은 강원도에서 출발하자"고 강조하며 "강원특별법은 강원도만의 의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지역을 위해 그 선봉이 되는 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설화

강원도민일보

2023년 05월 12일 (금)
종합 03면

균형발전 '강원 역할론' 부각… 권한이양 요구 결집·확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인선언대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인 선언 대회'에 참석한 각계각층 인사 500여 명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5월 입법을 촉구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기원했다. 서영

도내 각계각층 '강원원팀' 결의
개정안 특례 당위성 적극 피력
중앙부처·여야 정치권 호응 촉구

'지방시대 힘찬 개막-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인 선언 대회'에는 강원도와 도내 여야정치권, 18개 시군, 도의회, 도교육청, 18개 시군의회, 경제계, 주민자치회, 강원특별자치도범도민추진협의회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총출동한 자리였다.

지난해 12월 초 서울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출범식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범국민·범도민 여론 결집을 위해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강원인 선언대회였다. 11일 열린 강원인 선언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5월 입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본격화된 가운데 '강원 원팀'으로 대대적인 결의를 다진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5월 입법'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특례 등 권한 이양에 대한 중앙 부처와의 협의가 일부 난항을 겪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알맹이를 채울 합리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국면에서 열린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인 선언 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과 각종 특례 규정이 담긴 전부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염원하는 강원도민의 하나된 목소리를 중앙으로 확산시키는 창구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완전한 지방분권,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필수적이다"라는 '강원 역할론'이 집중 부각됐다. 특례 관철을 뒷받침할 당위성과 타당성까지 확실히 챙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내 시장·군수들은 이날 '강특법 이것만은' 발언에서 거미줄 규제 해소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특히, 도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날 자리에서 강특법 전부개정안 '5월 입법'에 대한 여야의 각별한 관심과 추진 의지를 앞다퉈 강조하고 나서 조속한 입법 절차 진행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도당위원장은 유 위원장이 소속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강특법 전부개정안 '5월 입법'의 9부 능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22일 제1법안심사소위 △25일 행정안전위원회 △29일 법제사법위원회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국회의 시간'을 띄우며 행사장 내 열기를 끌어올렸다.

또 이날 참석자들은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인 선언문을 채택, 20대 대선 강원도 공약인 강원특별자치도 현안에 대한 중앙 부처와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이날 결집된 범국민·범도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특례 규정 관철을 위한 막바지 정부 부처 협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강원도민일보

2023년 05월 12일 (금)
종합 03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달라” 규제 완화 한목소리

시장·군수 7명 특례 필요성 강조

지역민 피해 호소 조기 입법 촉구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달라!” ‘강원인 선언 대회’에 참석한 도내 시장·군수들은 ‘강원특별법 이것만은’ 발언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규제 완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하면서 5월 입법 관철을 촉구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의 청사진을 그리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소망했다. 육 시장은 “2017년 특별자치도법 시안을 만든 적 있다. 여기까지 오는 시간들이 굉장히 기대됐고 감동을 느낀다”며 “정부에서 일하면서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고 있다. 남은 국회 일정 동안 특별자치도의 컵이 대부분 채워져 6월 성공 출범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이어 “춘천시는 특별자치시대를 맞아 도청 소재지를 넘어서 강원도의 중심지를 추구한다”며 “춘천의 모든 것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원동력과 모델이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규제에 묶인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시장은 “도의원 때는 몰랐지만 시장이 돼서 기업을 유치해보니 태백시는 88%가 산림이고,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로 수자원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며 “특히, 80년간 석탄을 캤더니 온 동네에 폐경석이 쌓여 있어서 기업을 유치할 땅이 없다.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다. 또, ‘강원도는 감자와 옥수수 시대가 아니다. 첨단산업과 관광의 시대다’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강원특별법 통과를 위한 원팀을 강조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군사 시설 규제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주목했다. 이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키워드는 강원도의 중첩된 규제를 해소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에 있다”며 “하지만, 속초시는 인접한 고성군에 있는 군 통신 시설로 인해 군기지법이라는 규제 아래 고도제한을 겪어 주민들이 40년 가까이 집도 못 짓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는 중앙과 수도권의 논리가 아닌 지방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300만 강원도민이 똘똘 뭉쳐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군사 보호구역 해제와 교통망 확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홍천군은 접경지역 일부 지역보다도 더 많은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군사시설로 인한 제약은 가장 많이 받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도내 군인들이 상주하는 모든 지역에 군부대 수의 계약 등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용문~홍천 철도에 대해선 “용문~홍천 철도는 원주와 춘천을 잇게 될 철도시대 꼭짓점을 이루는 교두보 사업이다. 이 철도를 통해 강원도가 철도시대를 통한 새로운 도약을 맞을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임을 공감하고 있다”며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이 많겠지만, 일단 강원도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확실하게 얻어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그 몫을 도민에게 나눠줄 때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예타 대상에 선정됐는데 예타 대상 선정된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끝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 정치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인 선언 대회’에 참석한 도내 시장·군수들이 ‘강원특별법 이것만은’ 발언을 통해 ‘산림·환경·군사·농업’ 등 4대 핵심규제 해소 필요성을 강조한 뒤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정호

서흥원 양구군수는 주민 밀착형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조했다. 서 군수는 “주민들을 만나봤니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냐’ 질문을 많이 하신다”며 “정부의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그 권한을 강원도 지사에게 이양하기에 양구군민이나 강원도민에게 큰 패러다임을 만드는 기회가 될거라고 설명했다. 김진태 지사를 비롯해 도내 국회의원이 한팀이 된다면 ‘깡통 특자도’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터전을 실속있게 바꾸는 강원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반세기가 넘는 인제군의 규제 피해를 공유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최 군수는 “올해 나이가 70인데, 지금까지 강원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겪어왔다. 환경과 국방 등 4대 규제법으로 인해 인제군은 많은 피해를 봤다”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강원도의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출범을 모든 군민과 함께 열렬히 기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단체장들과 시군의회 의장들의 ‘강원특별법 이것만은’ 발언은 15일자로 게재된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년 05월 12일 (금)
종합 03면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과 김미정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위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위한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인 선언문’을 대표 낭독한 후, 김진태 도지사에게 강원인 선언문을 전달하고 있다. 김정호

강원특자도 성공 출범 뜨거운 도민 의지 확인

각계각층 인사 대거 참석 분위기 고조

◇…강원인 선언대회에는 강원도와, 각 시군, 지역 정치권은 물론 각계각층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분위기를 고조. 도의회에선 의장단과 함께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위위원장,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김희철·박관희·이승진·이지영·임미선 도의원 등이 참석. 시군의회에선 김진호(춘천)·이재용(원주)·정정순(삼척)·박영록(홍천)·심재섭(영월)·김영숙(횡성)·심현정(평창)·전영기(정선)·박기준(철원)의장 등과 배숙경·남숙희 춘천시의원 등이 참석. 부단체장은 김태훈 원주부시장, 김규하 동해부시장, 최종훈 삼척부시장, 안중기 횡성부군수, 김영균 평창부군수, 원홍식 정선부군수, 박경우 철원부군수, 최명수 화천부군수, 박광용 고성부군수 등이 자리. 도단위 기관장으로는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이정운 강원도 주민자치협의회장, 이돈섭 대한적십자사 강원도회장, 최인숙 강원디자인진흥원장,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최재용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김용욱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장, 모혜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강원본부장, 장영호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장, 이덕수 폴리텍Ⅲ대학 학장, 이선희 강원유통업협회장 등이 참석. 이와 함께 소양강댐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남부노인복지관, 동부노인복지관 선배시민과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강원특별법 5월 입법 촉구 여론을 결집.

강원도민일보
2023년 05월 12일 (금)
종합 08면

숨가쁜 국회의 시간 속타는 '강특법' 개정… 내주 분수령

여야 지도부, 본회의 25일 합의
소관 행안위 의사일정 변수 촉각
정부협의안 내주중 결론 급선무

'5월 로드맵'의 첫 관문을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면개정안 입법절차가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 등 정치현안과 맞물려 막바지 분수령을 맞고있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본회의 일정은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격 합의됐다.

양당 대표는 또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으로 촉발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원도와 도정치권은 5월 국회 임시회 일정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2차관문인 강원특별법 개정안 소관 행정안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혹시 모를 여야 정쟁에 의사일정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해킹 시도 관련 선관위 현안질의, 소방청 산불대응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안건으로 공직자윤리법도 다뤄질지 관심사다. 이어 오는 22일 행안위 제1법안소위를 열어 강특법 개정안 등을 다루고 24일 제2법안소위를 개최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강특법이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되기에는 빠듯하다. 당초 5월 로드맵 대로 30일 본회의 개최를 마지노선으로 무쟁점법안으로 제출되는 시나리오가 최상이다. 30일 본회의는 11일 현재까지 국회 공식일정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29일 임기만료를 앞둔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상임위원장 교체를 위해 개회될 공산이 크다.

이를 감안하면 일정상 세번째주로 접어드는 다음주중 강원특별자치도특례규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강원도와 정부 부처와의 협의안이 마무리되는게 급선무다. 이 기간 행안위 전체회의 공식 일정도 확정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물밑협상과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전도 총력을 기울여야하는 시간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출범을 위해서는 반드시 5월 국회에서 특례규정을 담은 강특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켜야한다"며 "국회일정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도와 도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5월 12일 (금)
지역 16면

양구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날 점등식 2023년(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날 점등식이 지난 10일 양구군민공원에서 서흥원 군수,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김선묵 군부의장 등 기관단체장과 양구불교사암연합회 관계자와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년 05월 12일 (금)
종합 02면

강원도의회 광역의회 최초 ‘의회 행정실무 매뉴얼’ 발간

강원도의회는 11일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의회 행정실무 전반을 담은 ‘의회 행정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의회 행정업무를 각 부서별·팀별로 분류해 업무별 목적·근거·절차, 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담았다. 실무자가 의회 행정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상에 걸맞은 행정 역량을 갖추기 위해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현정기자**

2023년 05월 11일 (목)
강원

춘천MBC

강원도의회, 의회 행정 실무 매뉴얼 첫 발간

강원도의회가 전국 시도 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회 행정 실무를 정리한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의회 행정 업무를

각 부서별·팀별로 나누고

업무별로 목적과 근거, 절차와

업무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에 걸맞는 행정 역량을 갖추기 위해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은 강원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백승호

bsh@chmbc.co.kr

연합뉴스

2023년 05월 11일 (목)
종합

강원도의회, 광역의회 최초로 '행정실무 매뉴얼' 발간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앞두고 업무 절차.유의 사항 등 정리

강원도의회 '의회 행정실무 매뉴얼' 발간
(춘천=연합뉴스)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의회 차원의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행정실무 전반을 포괄하는 '의회 행정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발간한 매뉴얼 모습. 2023.5.11 [강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의회 차원의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행정실무 전반을 포괄하는 '의회 행정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의회 행정업무를 부서별.팀별로 분류하고, 업무별로 목적.근거.절차와 업무 수행 시 유의 사항 등을 상세히 정리했다.

신규.전입 직원 등 업무경력이 짧은 실무자에게 의회 행정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침서로 활용한다.

최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등 지방의회 행정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행정역량 강화가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의회 행정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 비결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이에 도의회는 특별자치도의회 위상에 걸맞은 행정역량을 갖추기 위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매뉴얼은 다른 시도의회의 업무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누리집에 공개한다.

권혁열 의장은 "강원도의회는 물론 다른 시도의회의 자치분권 실현과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기타 이코노믹포스트, 신아일보 등 44개 언론사 보도

2023년 05월 11일 (목)
강원

강원타임즈

‘제2회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양양군 개최

5월12일 문화복지회관 강원특별자치도형 지방정부구성 다양화 방안토론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2023년 제2회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영동권역)’가 2023년 5월12일 오후 2시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린다.

강원도가 주최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 급변하는 시대에 강원특별자치도형 지방정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주민단체·주민 등 누구나 아카데미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도시군 공무원, 도시군 의원, 관련전문가,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이에 아카데미는 ‘강원특별자치도형 지방정부구성의 다양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와 김병국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이사장이 각각 발제한다.

아울러 좌장은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맡고, 토론자로 김길수 강원도의회 의원, 박윤미 강원도의회 의원,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장,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박용식 강원도 특별자치국장이 나선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5월 12일 (금)
종합 04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11일 춘천시청 앞에서 김우영 도당위원장, 송기헌·허영 국회의원, 전성·원창묵·한호연·박상진·김주환 위원장과 시·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대한 강원도민 10만 인터뷰' 출정식을 가졌다. 김정호

민주당 도당 "정치는 듣는 힘, 현장 목소리 청취"

강원도민 10만 인터뷰 출정식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정치는 듣는힘이강해야한다"며 2024총선 대비 '강원도민 10만인터뷰'에 나섰다.

도당(위원장 김우영)은 11일 춘천시청 광장에서 '위대한강원도민 10만 인터뷰' 출정식을 열고 민심청취를 시작했다. 이날 김우영 도당위원장은 "정당은 민심을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며 "논두렁, 밭두렁, 상가, 시장 등 곳곳에 있는 삶의 이야기를 내년 총선 정책에 담겠다"고 했다. 허영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정치는 말하는 힘보다 듣는 힘이 강해야 한다"며 "강원도민 10만 인터뷰로 민주당이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출정식엔 원창묵·한호연·전성·김주환 지역위원장과 당 고문, 정재웅·이승진·박윤미·이희자·이선영·박남수·신성열 등 지방의원, 허소영 도당 대변인 등이 참석해 의지를 다졌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3년 05월 12일 (금)
인물 27면

도소방본부 AI 앰뷸런스 시범 적용 선포식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이일)는 11일 원주소방서에서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 최재민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권역 AI 앰뷸런스 시범 적용 선포식을 가졌다.

강원경제신문

2023년 05월 11일 (목)
종합

홍천교육지원청, 홍천지역 학교(석화초·홍천중)이전 추진 탄력!

"학교이전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영욱 도의원) 본격 활동 돌입" "공청회, 교육환경평가 등 관련 절차 착실히 진행하기로"

강명옥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민철홍)은 지난 9일(화) '홍천지역 석화초등학교·홍천중학교 이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영욱 도의원을 위원장으로, 서진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추진위원회는 학교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가까운 시일 내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각각의 이전 부지를 신중하게 검토·확정하여 교육환경평가를 진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착실히 밟아 가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2023.4.25.자)' 개정으로, 교육감이 시행하는 투자사업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일부 변경되는 등 행정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세부 지침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관련 기관 간 재원 분담 등 재정 확보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영욱 추진위원장은 "홍천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을 조속히 해결하여 홍천을 명실상부 강원교육의 1번지로 만들어가도록 추진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철홍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학교이전 실현과 교육기관 재배치 등을 통해 홍천의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추진위원회에 감사를 표하였다.

2023년 05월 11일 (목)
사회

江原日報

[포토뉴스]홍천 너브나래 작가회 창립전

홍천 너브나래 작가회(회장:허원봉) 창립전이 11일 홍천미술관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이영욱 도의원, 이광재 홍천군의원, 박주선 홍천문화원장, 백금산 홍천예총 회장, 한종원 강원일보 홍천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5월 12일 (금)
인물동정 17면

김진하(왼쪽) 양양군수·진종호(양양)도의원은 12일 오후 2시 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년 05월 12일 (금)
종합 02면

망상1지구 현지 감사 마무리한 道 '공동주택 끼워넣기' 경위 파악 집중

강원도감사위 언론 보도 통해 제기된 내용 실체 확인한 듯
당시 핵심 인물 대면 조사 거부… 前 지사 진술은 요청 안 해

속보=인천 전세사기범 남모(62·구속 수감 중)씨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 특혜 의혹(본보 지난 8일자 1면 등 보도)에 대한 강원도 차원의 현지 감사가 마무리됐다. 강원도감사위원회는 열흘간 현지 감사를 진행,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위는 2017~2018년 사업자 지정 및 망상1지구 축소·분할을 비롯한 사업계획 변경 과정, 경쟁 업체가 있었음에도 사실상 남씨 측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단독 협상을 벌인 경위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던 9,000가구의 공동주택 건립 계획이 포함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감사위는 당시 경제자유구역청장과 망상사업부장을 비롯, 사업계획 변경에 개입한 핵심 인물에 대한 해명도 들어볼 계획이다.

감사위는 이들에게 대면 조사를 요청했으나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들은 서면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감사위의 설명이다. 이들은 타 지자체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겼거나 퇴직한 상태라 강원도가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에 대한 진술 조사 요청은 하지 않았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가 당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청장과 부장의 서면 답변 내용에 따라 진술 요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감사위의 판단이다.

감사위는 다음 주 중 현지 감사에서 확인한 사실들을 중간 점검한 후 발표 시기를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보여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또 이번 의혹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현지 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기영기자

江原日報

2023년 05월 12일 (금)
인물 27면

“도전역 ‘여성친화도시’ 지정 때까지 협력관계 다져가자”

도·여성가족연구원 광역협의체 10개 기관 참여 교육·강연 진행

강원도 내 18개 시·군 전역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도가 주최하고 도여성가족연구원이 주관한 ‘2023년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교육’이 11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복사·붙여넣기가 아닌 새로고침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주제로 한 이날 교육에는 춘천·원주·태백 등 7개 지정기관과 강릉·영월 등 3개 준비기관 등 총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유은주 전 도지사 여성특별보좌관이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 특성 이해와 적절한 사업 발굴을 통한 헛수고 줄이기 전략’을 주제로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기관이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특화사업 발굴에 필요한 전략을 소개했다.

◇강원도가 주최하고 도여성가족연구원(원장: 김숙영)이 주관한 ‘2023년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교육’이 11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어 임혜순 (주)꾸림 대표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 기본 계획,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경험으로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우리 지역 S-WOT 탐색’으로 강연에 나섰다. 임 대표는 각 기관의 주요 정보를 강점, 약점, 기회, 위기 등의 요인으로 구분하고 사업 발굴에 필요한 기본 요소를 점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에 참가한 각 시·군의 업무담당자와 컨설턴트가 의견을 교환하고, 성공적인 ‘강원도 전역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해 세부계획을 공유하는 실무회의도 진행됐다.

이상분 도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전역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지역 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여성가족연구원 내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는 매년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포럼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수빈기자

2023년 05월 12일 (금)
인물 20면

강원도민일보

강릉 노암초교부지 수영장 재탄생 '주민 염원 실현'

강원도교육청-강릉시 업무협약
수년간 수영장 건립 필요성 제기
도교육청 유휴부지 활용안 합의

강원도교육청과 강릉시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이 염원하던 학교 복합시설 사업 추진에 나선다.

11일 양 기관은 도교육청에서 신경호 교육감과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강릉시의장을 비롯한 도교육청과 강릉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강릉시는 북부권에 비해 남부권의 생활체육시설이 부족, 지역 내에서 꾸준하게 수영장 건립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도심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 부담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강원도교육청과 강릉시는 11일 도교육청에서 신경호 교육감과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강릉시의장을 비롯한 도교육청과 강릉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과 강릉시는 도교육청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암초교부지에 수영장 건립이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고, 강릉시가 수영장 건축과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해당 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교육청은 생존 수영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강릉시는 공공체육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하게 됐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사례를 본보기로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했고, 김홍규 시장은 "주민들이 염원하던 사업을 교육청과 함께 이룰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밝혔다. 정민엽

2023년 05월 12일 (금)
지역 13면

강원도민일보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적합' 추진 탄력

연내 설립 완료 목표 절차 진행
설립 시 위탁 예정 시설 11개
자연휴양림·탄광문화장터 등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적합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는 최근 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공단 설립에 대해 적합하다고 결정했다. 교수 등 민간전문가, 시의원, 관계 공무원 7인으로 구성된 설립심의위원회는 사업 적정성과 경제성, 공공성 등 12개 지표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적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설립 심의를 끝으로 공단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조례 제정과 임원 공모 및 임명, 설립 등기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설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예정인 시설은 총 11개로 공원묘원, 화장장,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쇠바우골탄광문화장터 등이다. 시는 그동안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결과에 따라 용역결과 검증 심의, 주민공청회, 강원도협의를 거치는 등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지난 2020년 공단 설립 계획 수립 후 강원도 1차 협의, 2021년 공단 설립 타당성 예비검토, 2022년 타당성 검토 용역, 2023년 주민공청회와 강원도 2차 협의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의 전문·체계적 관리를 통해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2020년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해왔다"며 "최종 공단 출범까지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공공시설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우열

2023년 05월 12일 (금)
지역 14면
강원도민일보

횡성군 의료취약지 원격 재활치료 본격화

장애인 대상 의료지원 시범사업

도재활병원 협진 맞춤형 처방

보조기기 지원·주거환경 개선도

횡성군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취약지재활원격 진료 지원을 본격화한다.

군은 지난 3~4월 사전 대면 진료를 완료한 신규 및 기존 장애인 57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재활원격 진료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거주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횡성지역은 노인인구와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재활 전문 의료기관의 부재로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횡성군에서는 9개 읍면 보건기관의 물리치료실 및 인력을 기반으로 2017년부터 ICT를 활용한 재활원격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단일사업으로는 전국 최다모형의 시범사업이다. 사전대면진료를 완료한 지역내 장애인 57명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3가지 모형으로 분류하여 1~2개월마다 원격 진료에 참여하게 된다.

협진의료기관은 강원도 재활병원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및 처방에 따라 맞춤형 재활치료 처방이 이뤄지며 소속 보건기관의 물리치료사가 모형에 따라 내소 및 방문재활치료를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 보조기기 센터,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과 연계해 보조기기 지원, 주거환경개선, 119응급벨 설치 등도 연계하고 있다. 김영대 횡성군보건소장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재활원격 운영으로 급변하는 스마트 의료환경을 적용, 보건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재활치료가 필요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2023년 05월 12일 (금)
지역 15면
강원도민일보

영월군 남부권 중심지 도약 국비확보 총력

제천~영월 고속도 건설사업 등

52개 사업 1850억원 확보 목표

정치권·도 협력 공동대응 방침

영월군이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통한 강원 남부권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섰다.

군은 내년도 중점 사업으로 고속도로 건설과 다목적드론센터 건립,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조성,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강변저류지 수질 정화 및 탐방로 정비사업 등을 선정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한 52개 사업에 모두 185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정부 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특별관리와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국책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동향 파악과 함께 유상범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정부예산 편성 시기 및 국회 심의 단계에 맞춰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다목적드론센터 건립 등 지역특화사업은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강원도와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최명서 군수는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확보 전략을 마련해 우리 군 주요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준

江原日報
2023년 05월 12일 (금)
지역 20면

동해시 '염분차발전' 상용화 박차

오늘 한수원 등과 업무협약 내년부터 실증 사업
세계 최대 규모 100㎾급 사업 추진·센터 구축 기대

【동해】동해시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블루 에너지로 손꼽히는 '염분차발전' 상용화에 나선다.

염분차발전은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담수와 인근 해수의 농도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초장주기 에너지 저장·발전이 가능한 차세대 에너지 사업이다.

시는 12일 코트야드 메리어트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탄소중립 및 글로벌 해양에너지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심규언 시장을 비롯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오진택 드림엔지니어링 대표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다. 동해시를 비롯한 3개 기관은 해양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관련 협의체 운영과 인재양성 등에 협력하게 된다.

특히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 세계 최대 규모인 100㎾급 염분차발전 실증사업(사업비 약 100억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100% 투자로 추진되며, 2026년부터 상용화를 위한 MW급 발전사업까지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염분차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해안권(강원도, 경상북도 일대)을 관할하는 염분차발전 통합관제·연구센터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

심규언 시장은 "전 세계가 에너지 대전환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에 염분차발전 사업은 지자체와 공기업이 미래 청정에너지 발전을 도모하는 선진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내외에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익기기자 igjung@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5월 12일 (금)
지역 09면

춘천시 역점 추진 정원도시 조성 속도

시-원주환경청 상중도 관리권 논의
일대 소재실용화센터 등 조성 방침
오늘 정원드림 프로젝트 발대식

춘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원도시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본지 취재결과 춘천시와 원주지방환경청은 상중도 폐천부지 관리 주체 변경에 대해 협의 중이다. 현재 상중도는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이다. 춘천시는 이를 이관해 상중도 일원에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비롯한 정원도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폐천부지는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들어서는 인근 6만7000여㎡의 하천으로 물을 활용한 정원테마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시는 보고 있다. 이르면 시는 이주중으로 관리권 인계 여부에 대해 회신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정원분야 전공자들에게 효자동·약사동·온의동·동내면 일대 정원조성지를 제공하는 정원드림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정원드림프로젝트는 정원 관련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팀이 정원작가와 함께 실습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에 이어 올해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12일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정원드림프로젝트 춘천권역 발대식을 갖는다.

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와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기반조성 등 정원도시 조성 사업 추경안 48억5000만원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 용역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상중도 일원에 건립될 예정으로 정원소재 연구동, 온실, 방문자센터 등이 들어선다.

앞서 지난해 9월 강원도·춘천시·산림청·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4개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 2025년 운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승은

강원도민일보
2023년 05월 12일 (금)
사설/칼럼 19면

전·월세 신고 자발적 정착으로

-사기 대비 및 권리 보호 협조하고 꼼수는 안돼

1년간 추가 연장했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말로 끝나고 내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이 법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단속에 나서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했으며 이달 말 종료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서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제도 정착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공인중개업계에서는 제도 정착을 위한 능동성이 요구됩니다.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이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경우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해도 되고,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메뉴로 연결되므로 계약서 등록만으로 처리됩니다.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과 상관없이 100만원이 처분됩니다. 계도기간이 추가 연장되면서 전년 대비 신고건수는 31%p 늘어나는 등 제법 알려졌으나, 아직도 시행 정보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일각의 임대인은 소득세 등 과세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불만이 있지만 투명한 시장 거래의 효과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 및 아파트 이외 물건에 대한 정보량이 증가하면서 이전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단적으로 벌어진 부동산 사기범죄 대비 차원에서 자발적인 신고가 따라야 합니다.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심지어 인명이 훼손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에 더 이상 방치는 어렵습니다.

신고제 대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임대 측에서 월세는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별도 관리비는 높이는 편법 사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업계에서는 탈세 효과를 노리는 임대인의 꼼수에 편승할 경우 도리어 시장 왜곡을 가져오는 만큼 현혹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속 과정에서 계약서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까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5월 12일 (금)
사설/칼럼 19면

지역상품권 제한 국민 납득해야

-대형병원·농협마트 등 대상, 불편 불가피

정부가 이달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강원 도내 시군은 시민 불편을 우려하고 있어, 언제 본격적으로 시행될지 추이가 주목됩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매장을 제한한다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협 마트 등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없어 상품권 기능이 약화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면 지역상품권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영업난과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하게 했던 지역상품권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라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발표하고 5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변경된 지침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이지만 대형병원, 주유소, 농협 하나로마트 등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당장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야 할 도내 지자체는, 시행 방안이나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가맹점 약 1만4000여개 중 300여 개가 제한 대상 매장이지만, 전체 모바일상품권 사용 금액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원주와 강릉도 총사용액의 28%와 26%를 이들 매장에서 사용했습니다. 특히 강릉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산병원도 상품권 제한 업장에 포함됩니다. 시민들은 지침이 시행되면 상품권을 더 이상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도내 시·군은 이런 주민들의 불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정부의 통보로 지역 조례를 일제히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상품권 가맹점 제한은 국민의 소비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지침을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곤란합니다. 해당 장관 등 부처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정책 변화의 당위성을 당당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년 05월 12일 (금)
사설/칼럼 25면

동해안 산불 국방대응 수준, 문제는 예산 확보

산림청, 중앙·지방 안전상황 점검회의 보고
초대형 헬기 늘리고, 재난훈련센터 설립 검토
재원 대책 마련 등 실질적인 후속조치 있어야

산림청이 동해안 산불 예방을 위해 국방대응 수준의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최근 국무총리 주재 중앙·지방 안전상황 점검회의에서 동해안 산불 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산림청은 동해안의 대규모 송전선로 인근(전신주 반경 1.5m이내)의 나무를 올 연말까지 모두 정리하거나 키 작은 나무로 대체키로 했다. 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두껍고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로 전선을 감싼 절연케이블로의 교체와 지중화 사업도 검토한다는 점이다. 봄철이면 반복적으로 발생,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동해안 산불 예방 대책에 기대를 갖게 한다. 올 4월11일 오전 8시22분쯤 강릉시 난곡동 야산에서 일어난 산불은 초속 20~30m의 태풍급 강풍을 타고 경포호 북쪽 일대로 급속히 번졌다.

이 불로 주민 1명이 숨졌다. 건물 수십 채가 탔고 주민 500여명과 호텔 투숙객 7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강릉 일대 15개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고, 동해~강릉 간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경포호 일대와 강릉 앞바다가 검은 연기로 뒤덮이는 걸 목격한 시민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산불 재난의 악몽을 떠올렸을 것이다.

소방 당국은 인력 2,000여명을 투입했으나 계속된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소방헬기도 제때 띄우지 못했다. 산림청이 이런 긴박했던 상황에 동해안 산불 예방 대책을 수립, 실행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산림청이 계획하고 있는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대형 재난사고를 겪지 않는 국가는 없다. 그러나 사고 이후 대안을 만들어 낼 줄 알아야 선진국이다. 이번 강릉 산불 사고가 소방안전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2025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을 활용, 동해안 전 지역에 인공지능으로 불씨와 연기를 실시간 감지·판독·조기 경보하는 '지능형 산불 방지 ICT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이 그래서 돋보인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존 진화차보다 담수량 3.5배, 방수량 4배에 달하는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2027년까지 20대로 확충하고 담수량 1만ℓ 이상의 초대형 헬기도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산불재난 훈련센터'의 설립도 검토된다. 산불 예방 대책으로서는 획기적이다. 중요한 것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에게는 기대감만 부풀려 놓은 상태에서 실망만 안겨줄 뿐이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재난안전 정책의 큰 틀 아래서 방향이 잡혀야 한다. 무슨 일이든 그 청사진이 웅대할수록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 한다. 큰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그만큼 넓게 시작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산불 예방 대책은 안전대한민국으로 가는 큰 밑그림을 그린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江原日報

2023년 05월 12일 (금)
사설/칼럼 25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선언, 새 출발 계기 삼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심각 경보를 해제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돌아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전문가 권고를 반영한 결과다. 보건 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검사 권고를 해제한다. 또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장소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전 세계를 할퀸 코로나19는 우리에게 3만5,000명에 달하는 누적 사망자, 막대한 경제적 손실, 폐업과 해고, 감염에 대한 불안 등을 남겼다. 하지만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20일 이후 3년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최근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봄철 이동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일일 평균 확진자는 450명으로 1주일 전인 4월26일부터 지난 2일 사이 일일 평균 확진자 333명보다 117명 늘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의 또 다른 변이인 XBB.1.16(아르크투루스) 변이가 국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손 씻기와 밀집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변이는 전파력이 이전 XBB.1이나 XBB.1.5보다 강하고 감염되면 결막염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지난 3년여간 잘한 점과 부족했던 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타날 감염병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또다시 출현할 수 있는 위협적인 변이 바이러스, 또는 완전히 새로운 미지의 감염병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를 적극적으로 투여하는 환경을 만들고 환자 발생 시 빠르게 진단해 치료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공공의료의 중요성도 뼈저리게 느꼈다.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에 대폭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평소 개인방역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빠르게 일상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는 많은 의료진과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는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자산이다.